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영탁

속도의 충돌과 사고(思考)의 충돌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2006)에서 '속도의 충돌'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분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속도의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곳으로 정부조직, 학교, 정치조직, 법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나 법률 분야의 변화속도가 제일 더디다는 게 흥미롭다. 미국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점에서 시선을 끌기도 한다.

여기서 본인은 우리네가 지니고 있는 사고(思考)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세대 간, 계층 간에 형성된 인식이나 판단의 괴리는 엄청나다. 결국, 우리사회에 만연된 '속도의 충돌' 못지않게 '사고의 충돌'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로서 앞으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사회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선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우파 대 좌파 또는 보수 대 진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분파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처럼 매사에 의견이 갈리고 서로를 헐뜯기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치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고쳐먹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늘 문제가 있다는 발상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세대차이만 해도 그렇다. 워낙 급속하게 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세대와 연령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의 기준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같은 집에서 한 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잘 안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데서 나아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같은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는가 하면 이것이 지나쳐 서로간의 대화채널이 중단되는 수가 흔히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가 더 심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사고나 인식의 격차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우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은 필수적이다. 아니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다. 문제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다. 이제부터라도 평소 나와 같지 않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자.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사사건건 시비에 휘말리는 수밖에 없다.

둘째, 여건이 달라진 만큼 사고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그것도 정보화시대 50년 역사가 이제 곧 막을 내리고 후기 정보화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이런 판에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사고나 논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건강에 주의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인간이다. 현실적으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는 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는 셈이지만 그만큼 여건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도 된다.

셋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여건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사고도 달라져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원칙이다. 여기서 원칙은 기본에 관한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주변의 약한 사람을 돕고…' 등은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원칙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진리이다. 또한, 원칙은 영구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인간행동의 지침이다. 이러한 원칙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보다 완성된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속도의 충돌' 이상으로 '사고의 충돌'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어렵지만 이것도 사회지도층부터 솔선할 일이다. 남보다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원칙에 충실토록 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계층 간의 사고나 인식의 격차를 극복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갉아먹는 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 자질' 철저히 따져야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전국단위 선거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전·현 정권 간의 대결구도로 흐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결론 나면서 '북풍'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23)를 목전에 두고 있어 '노풍'이 선거구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과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로 인해 무소속 돌풍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풍과 노풍의 정략적 이용은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오히려 무상급식이나 교장 공모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지방과 관련된 현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예고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잘못 선택해 단체장과 의원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호주머니를 털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일은 지난 선거로 마감해야 한다. 또한 시국사건을 제외한 전과자나 병역기피, 세금미납자 등에게 표를 준다면 유권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탈법도 경계해야 한다. 불·탈법은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유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유권자 혁명'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터진 교육비리 제도적 개선책 시급하다

고질적인 교육비리가 또 적발됐다. 검찰은 교육계 납품비리 혐의로 유제원 전남도 교육위원을 전격 구속했다. 현직 교육위원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교육위원의 비리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허술한 납품제도가 비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교육위원이 특정물품에 대한 수요조사 후 예산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예산이 지급될 학교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에도 개입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교재·교구 구입시 채택되고 있는 조달청의 3자단가 구매 방식도 교육위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교육위원에게 '찍힌' 실·과나 학교의 경우 예산 삭감은 물론 임시회나 사무감사·조사권 등을 통해 추가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H사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전남지역 초·중·고교 441곳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무려 41%에 이르는 183개교(학교당 2000만원)의 사업을 수주, 납품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역 교육계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계 비리는 부실 공사, 부실 자재 납품 등으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시급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비리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그러나 비리를 없애기 위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것 역시 교육적 해법과 거리가 멀다. 자율권은 부여하되 사전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납품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 칼럼

반태수

의사들은 라식 수술 안받는다?

라식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시력교정을 앞둔 환자들은 라식과 라섹의 많은 이름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안과 의사들은 라식수술을 잘하지 않는다.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시력교정수술은 시력교정기구인 안경과 렌즈의 불편함 정도에 따른 본인의 판단 여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실제 주변의 많은 안과 의사들이 안경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상당수의 안과 의사들은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안경을 벗고 있으며 우리 병원의 원장님도 라식 수술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며 가까운 친척들은 물론이고 부인이나 자녀도 대부분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있다.

이처럼 라식은 안경이 불편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받지 않는 것일 뿐 위험성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사장비가 발달하고 최첨단 레이저 및 의료진의 시술 기술 등의 현저한 발전으로 수술 후 경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눈에 맞추는 다양한 맞춤 라식을 시행하고 있다. 라식 안전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시술자가 점점 늘어나 대중화된 수술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력교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관심사는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과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라식과 라섹, ICL(안내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수술방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이름도 각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병원마다 달라 더더욱 환자분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시력교정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라식은 각막실질부에 절편을 만들어 각막 중간층에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고 라섹은 상피층을 벗기고 각막표층에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며, 안내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라식과 라섹의 수술방법은 이처럼 다르고 각 수술의 이름도 다양하다. 다빈치, 인트라, 아마리스, 프라임, 블루라인, 커스톰뷰 등은 엑시머 레이저나 펨토초 레이저(각막 실질부를 교정하기 전 각막 절편을 만드는 레이저)의 기계 명에 수술 명을 붙여서 생긴 용어들이자 수술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안내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삽입하는 렌즈의 일종이며 특히 초고도 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하기 위해 각막과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눈 속의 수정체 위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인체에 가장 친화적인 재질로 만들어졌다. 안내렌즈삽입술은 시력교정수술 중 안전하고 시력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렌즈삽입술은 국내에서는 라식 보다는 늦게 보급됐으나 외국에서는 역사가 오래됐고 안정성이 입증된 수술이다.

〈밝은 안과 21 원장〉

기고

안병수

1인 창조기업 시대

올해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서 경기 회복을 알리는 기대 섞인 신호들이 나오지만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다.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도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청년 벤처기업이 사라져 가고 있다. 덩달아 젊은 청년들의 벤처창업 꿈도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 준비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면 청년이나 국민의 창업의욕을 왕성하게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은 국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경제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말 그대로 1인이 생산, 판매,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사업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체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의 활동 영역은 지식콘텐츠, 출판, 온라인 상거래 등 지식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때문에 인터넷 등 환경변화에 익숙한 IT기술기반의 청년층부터 전통 장류를 제조하는 고령층까지 모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순창 고추장의 이기남 할머니는 고추장 손맛으로 연매출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주부 웹 디자이너 강혜진씨는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예산은 4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했다.

1인 창조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앱 스토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이폰용 사격 시뮬레이션 게임인 '아이건'을 내 놓은 한다윗 바닐라브리즈 대표는 300만 여건에 이르는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매출액도 10억원 이상 거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성공사례이다.

IT분야 리서치 전문기업인 가트너에 의하면 올해 스마트 폰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 규모가 62억 달러(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모바일 광고 매출도 6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앱스토어 시장의 출현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가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전 벤처열풍과 비교될 수 있는 1인 창업 신드롬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대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여기에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구직이 아닌 창직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도 직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가 보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공무원, 대기업 중심적 취업 일변도의 직업가치관을 바꿔 창의성과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패기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無等鼓

도시 아이들의 낙농가 현장체험 유익… 기회 많았으면

작년에 나주의 한 낙농가에서 치즈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자연 치즈를 보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직접 치즈 만들기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다 만들어진 치즈를 먹기만 하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막 젖소의 우유를 짜다가 치즈를 만드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하니 너무나 좋아하고 신이 나서 어찌할 줄 몰랐다.

이런 놀이와 현장체험은 어린이가 우리 젖소와 우리 우유, 그리고 그것의 가공품인 치즈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유익했다. 우리 주부들도 숙성치즈(3~6개월 숙성)에 비해 치즈 특유의 냄새가 없고 우리 어린이들 소비자의 입맛에 맞으며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신선치즈도 배웠다.

낙농가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기회도 되는 이런 행사가 자주 펼쳐지고 도시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자주 참가한다면 농가는 소득을 올려서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천강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싹쓸이 경보'

미국 선거에서도 '줄 투표'가 있다. 우리처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싹쓸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능력은 별로인데 인기 정치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난다.

1980년 대통령·상원의원 동시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레이건의 인기에 힘입어 무더기 당선되면서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줄 투표'에 따른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다.

옷자락 효과는 이번 지방선거처럼 상·하위직을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에 더 맹위를 떨친다. '지역감정'도 한몫을 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시의회를 석권한 것이 그 예다. 집권 이후 '영남 공들이기'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감과 박광태 후보의 대중적 인기에 '묻지마 투표'가 합작한 결과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한나라당도 25개 구청장과 96석의 서울시의회를 싹쓸이했다.

폐해는 컸다. 광주의 경우 시의원 19명 중 5명이 비리·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러났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거셌다. 막판엔 같은 당 구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오만방자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맘에 드는 당의 후보를 무조건 내리 찍는 '줄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정당과 상관없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줄 투표의 망령이 아른거리고 있다. 지난주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두 번째'를 뽑은 후보들은 환호작약하고, 다른 후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왜들 이러시는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